



진정한 참사 책임자

윤석열은 몰러나라

〈노동자 연대〉 정규 호(445호)에는 특별 호외에 실리지 않은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 늘어나는 미분양과 건설·금융 위기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 이란 정부는 왜 하잡 착용을 강요하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 •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존 몰리뉴 조사(弔詞) 등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 등을 들었다. 우파가 만든 가짜뉴스 사례도 언급했지만 구색 맞추기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비난과 규제 촉구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은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직접 공격했다.

얼마 전 학술원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다.

한동훈은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고, 〈더탐사〉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위주의적 행태

그러나 가짜뉴스는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부나 우파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 용어를 오·남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보통 허위 정보를 뉴스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다양한 의견 표명과는 다르다.

설령 어떤 의혹이 설득력이 떨어진 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다.

MBC의 비속어 보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짜뉴스로 공격한 것은 윤석열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 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압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쓰라고 한 것을 비판한 보도들에 대해 얼마 전 대통령실이 “단순 행정적 용어 통일”에 불과한 것이라 반박하며 “가짜뉴스” 법적 대응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이나 ‘천공 개입’ 의혹도 사안의 중요성과 보도의 설득력 여부와는 별개로 단지 의혹 제기만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위선적인 가짜뉴스 비난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비난은 위선적이다.

그들이야말로 밥 먹듯이 사실을 맥락에서 떼어 내거나 비틀고 침소봉대해서 진실을 왜곡해 오지 않았던가?

메스꺼운 위선

가장 최근 〈조선일보〉의 행태만 봐도 그렇다. 〈조선일보〉는 고물가·고유가의 절박한 고통에 맞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이라고 비난하고(11월 23일자), 화물연대 한 조합원이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쏜 것을 두고 “테러”라고 침소봉대하며(11월 28일자), 앞장서서 파업을 비난했다.

또, 한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2차 가해 범죄”라고 게거품을 물었다(11월 17일자 사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기상천외 억지 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12월 15일자 김창균 칼럼).

〈조선일보〉가 가진 영향력은 여느 가짜뉴스 생산자보다 막강하다. 따라서 그 해악도 더 크다.

사실, 부가 한줌의 소수에 집중돼 있

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이 체제하에서, 소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기존 질서와 기구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조선일보〉가 애초 온전한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다.

물론 오늘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기성 체제와 기존 질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가짜뉴스가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 내 이전투구가 심해질수록, 권력자들은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부추기며 유용한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반동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증거 찾기에 확증편향적으로 몰두하기 십상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투쟁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진짜 타깃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비난하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비난하면서 정부를 향한 의혹 제기를 막고,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럼으로써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가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이나 ‘천공 개입’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공격한 것도,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이런 주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 등 우파는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도 본디 의미인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타협과 공존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기업인들과 부유층을 위한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타협하고 조율하는 뜻이다. 두 정당이 하루빨리 부자 감세 예산안과 산적한 노동·연금·교육 개악 법안들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우파 정부와 언론의 위선적인 가짜뉴스 비난(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처벌 촉구)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혁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방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더해 주52시간 노동제로 칭하는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번 권고문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주가 아니라,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까지 확대해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탄력근로제에서는 3개월 이내일 경우 매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를 미리 확정하는 게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번 권고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를 사후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한다.

이처럼 권고문은 노동시간에 관한 사용자들의 권한을 대폭 늘려, 시장의 변화, 물량의 변동에 따라 사용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덜 주면서)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경쟁으로 임금 총액 삭감

권고문의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이 노동 공약으로도 중요하게 내세운 바 있다.

직무성과급제에 따르면, 한 기업 안에서 직무 분석과 평가(직무평가는 당연히 기업의 이윤 창출 기여도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를 거쳐 S~Z까지의 직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에게 마음껏 연장근로를 시킬 권한을 주려고 한다

무에 따른 급여가 차등 설정된다. 이럴 경우 S등급의 직무에 포함되기 위한 노동자들의 경쟁과 분열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직무급제는 직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권고문의 내용에도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등급에 진입하려는 경쟁은 기업 수준을 넘어서 벌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도 강화될 것이다. 세대 상생이 아니라 세대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직무급제에 성과급제를 결합해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즉 같은 등급의 직무 안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의 경쟁도 격화된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들은 노동자 사

이에 경쟁을 조장해 임금 총액을 낮추기 쉬워진다.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고임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직위가 낮거나 성과가 떨어진다며 훨씬 적은 임금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 높은 '테일러주의'의 목표는 "고임금과 저인건비"라고 한다.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이 용어의 의미는 간단하다. S등급 상위 성과자에게는 임금을 높여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체계를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해 임금 총액을 낮추려는 것이다.

쟁의권 공격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도 개악돼, 점거 투쟁 금지가 명문화되고(노조

법 제37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또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다.(노조법 제43조)

그런데도 권고문은 추가로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권고문은 쟁의권 공격 사례로 미국의 1947년 태프트-하트리(Taft-Hartley)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냉전 시기 미국 지배계급 매카시즘 광풍의 신호탄이었다. 연대파업 금지, 대체인력 저지 투입(피켓팅) 불법화,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현재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행위만 금지하고 처벌) 등을 담고 있다.

태프트-하트리법은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윤석열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권고문은 그동안 윤석열이 주장해 온 것들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될 공산이 크다.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경쟁적인 임금체계 도입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저항할 수 있는 쟁의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



윤석열 정부는 쟁의권을 제약해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처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거라며 기뻐했다.

“지지율 회복세의 원인은 명확하다. 첫째는 국민이 윤 후보를 뽑아준 근본 이유인 법과 원칙의 회복, 좌파정권 청산 미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기홍 칼럼, 12월 9일자)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벌인 힘 대결에서 이긴 정부·여당과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은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생중계 행사에서 “인기가 없어도” 연금·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4호,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투쟁의 패배로 윤석열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역전시킬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최근의 쥐꼬리만한 지지율 회복이란 게 애초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보수층이 일부 재결집한 수준임을 인정한다.

이전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었던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이 빠르게 잘 대응해 세월호 참사 직후 지지율이 떨어졌던 박근혜처럼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위로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전 박근혜 지지율은 50퍼센트대였다. 반면 윤석열은 20퍼센트대로 더 떨어질 것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윤석열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행사에서 “인기가 없어도” 연금·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의 노동계 지도부들을 여론의 이름으로 압박하려는 속셈이다.

노동계 지도부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실질적인(효과적인) 연대 투쟁이 조직되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화물연대 투쟁을 이력저력 종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취약한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건재하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뚜렷한 대책도 없다. 특히, 미·중 갈등의 심화로 경제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패배가 노동계급 전반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자신이 노동 개혁이 “인기가 없다”고 한 것도 노동계급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언뜻 내비친 것이다.

화물연대 기층 노동자들의 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파업 종료 찬반 투표에 대거 불참했다(전 조합원 대비 13.67퍼센트

투표). 지도부의 투항에 동참하기 싫다는 마음을 투표 불참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온갖 책임 회피 노력을 해 왔으나, 결국 유가족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감싸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의 난처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직 통제를 맡긴 측근을 함부로 내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을 계속 감싸는 것도 부담이다. 분노의 화살이 결국 윤석열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협의회 출범 전후로 한덕수, 권성동, 송언석 등 여권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도 사실 두려움의 반영이다. ‘세월호 트라우마’인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퍼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 이태원 참사 항의, 윤석열 퇴진 운동 등에서 운동의 성장에 브레이크 노릇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

는 불신이 늘었다. 지지율이 줄었다.

민주노동과 정의당도 별 구실을 못해 존재감이 약화됐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혼쾌히 지지할 정치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윤석열 정서는 모순돼 있고 따라서 상황의 유동성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즈음 발표된 한국개발 조사를 봐도 모순된 대중 정서가 확인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퍼센트였다(파업 지속 지지는 21퍼센트). 그러나 안전운임제 해법 문제에서는 화물연대 요구 지지가 48퍼센트(정부안 지지는 26퍼센트)였고, 윤석열의 파업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51퍼센트였다(정부 대응 지지는 31퍼센트).

윤석열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정서는 개혁주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지, 윤석열의 우익 정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제한적 지지율 회복이 그나마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줌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 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으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한층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를 통해 참사 국정조사 지연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사실 애초 예산안 통과 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공권력' 우선순위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직접 책임론을 경계해 왔다. 그 대신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나마 여권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미 기대감이 떨어졌다.

한편, 유가족은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이 실무 차원에서 참사 책임자일 뿐 아니라, 진상 규명이 철저히 되려면 참사 수사 경찰의 지휘자인 이상민을 직무정지시키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만, 결국은 불만을 달래 대중 운동 측의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윤석열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

9월에도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해임되지 않았다.(이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별로 없다.)

이상민 해임건의안도 윤석열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참사의 정치적 책임자인 윤석열에게 이상민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어쩌면 윤석열

의 면피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파면 시도가 "대선 불복"이고 헌정 질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난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투쟁이 범정부 차원의 탄압에 직면했을 때도 화물연대를 도울 것처럼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덜컥 수용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일단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변명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도대체 왜 통과시킨 것인가.

애초 화물연대 지도부와 협의해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개혁안을 국회에 발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선물을 줄 것처럼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 놓고는 몇 먹인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됐던 듯하다. 가뜰이나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투쟁이 변변치 않아 범정부적 탄압에 움츠러들던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항의, 화물연대 투쟁, 윤석열 퇴진 운동 등 윤석열을 위협한 운동들마다 뒷걸음치거나 배신한 것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성격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민주당더러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런 비난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자 노동계의 개혁 입법 요구에 대한 맞불이다. 노동계는 민주당과 공조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어시스트' 덕분에 윤석열은 11월 위기 국면에서 잠시 한숨 돌릴 틈을 얻었다.

이 틈을 이용해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15일 TV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인기 없는 개악안이 통과되고 시행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의 노조법 개악 때도 반대하는 듯하다가 막판에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가 나서 개악에 협조했다.

박근혜 때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나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박영선 등이 나서 개악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성격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게 기업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자본주의 수호 정당이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집권을 경험하면서 기업인들과 고위 관료층 내에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지배 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사회운동 출신 지도자 출신 인사들의 공식정치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대중

의 불만을 달래 대중 운동 측의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는 것이다. 지지하고 도와 주겠다는 제스처로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계급의 생계비 문제 등에서 왼쪽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가 줄타기 끝에 기업주들의 이익이 상당히 관철되는 데 도움을 준다.

노동운동이 개혁 입법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공조할 때조차도 정치적 독립성(독자적 행동과 비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전인할 수 있을까?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전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국민의힘(그리고 그 전신들)에 비해 차선책이지만 말이다.

사회운동가 출신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인적·재정적 기반은 기업주들과 김진표나 한덕수 같은 국가 관료 출신자들이다.

민주당 내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 국민의힘과 가까운 성향의 인물들이 즐비하다. 이미 10여 년 전쯤에 조국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는 지금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 자금의 상당 부분도 기업인들로부터 나온다.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이 불법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기업인들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케이티(KT) 전직 임원들이 주류 양당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했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친기업 정책들을 실행했던 것은 민주당의 이런 기반과 관련 있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사회운동의 온건한 경향을 포섭하는 전략(‘진보적’ 포퓰리즘)을 취한다. 이 때문에 사회운동 내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안별(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등에서) 민주당과의 제휴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직된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전술적 타협을 해야만 할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배신을 비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비하면 두 당의 차이는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전인하려면 민주당과의 연

대를 제한성과 한시성을 넘어 일관되게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대중 운동을 확대하기보다 대중 운동에 브레이크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1980년대 말 이래 거대한 대중 운동이 분출할 때마다 기성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충격 흡수 장치 구실을 해왔다.

충격 흡수 장치

특히, 운동 명망가들, 총학생회 출신자들, 참여연대와 여연 등 주요 엔지오 지도자들, 주요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구실을 했다.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민중주의(포퓰리즘)를 추구해 올 수 있게 해주는 인재들이다.

이들은 ‘사회를 바꾸려면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진보파들을 앞세워 아래로부터의 투쟁 잠재력을 길들이려 하고 체제를 반대하는 좌파들에게 허무감을 주는 효과를 내고자 했다. (본지 406호에 실린 최일봉의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를 보시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 진보파들이 민주당을 개혁하기는커녕 기성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비판과 냉소도 만만치 않다. ‘386’ 운동권과 주요 엔지오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위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한다.

민주당 견인론은 투쟁을 강조하는 경우 아마도 민주당 진보파의 이런 한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그 성격상 결코 서민층(노동계급이 다수를 차지하는)의 이해관계를 진지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없다. 민주당 견인론은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에 근거하는 것이다.

윤석열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주류 양당 모두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이 끌고 러워하는 쟁점들(이윤을 잠식하는 사회적·경제적 요구 등)을 포함하면서 윤석열에 맞서야 한다.

이런 독립적인 대중 투쟁이 최근 한국 역사에서 진보적 변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투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은 행동하기를 거부하거나 기껏해야 미온적이었다.



윤석열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주류 양당 모두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투쟁하는 민주대연합?

투쟁을 통한 민주당 견인론은 민주대연합(역사학의 용어로 인민전선) 전략의 한 형태다.

민주대연합은 국민의힘 등 수구적 세력에 대항해 일부 친자본주의 정치 세력(민주당)까지 포함한 모든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대연합을 이루자는 전략이다.

다만, 노동계 정당들과 민주당이 상층에서 선거 협약을 맺는 방식과 동시에, 기층 투쟁을 통한 민주당 압박·견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의 좌파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엽 프랑스 사회당의 좌파인 마르소 피베르는 이를 “투쟁하는 인민전선”이라고 불렀다. 피베르는 노동자들 속에서 ‘혁명적 행동위원회’ 운동을 벌였다.

그와 동시에 피베르는 인민전선 정부를 견인하겠다며 정부에도 참여했다.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는 사회당과 자유주의자들에 정치적 기반을

둔 급진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공산당은 인민전선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정부 밖에서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1936년 공장 검거 운동이 고강도되자 급진당은 겁을 먹었고, 공산당과 사회당은 급진당과의 인민전선 정부를 유지하려고 노동자 점거 물결을 억눌렀다.

공산당 대표 모리스 토레즈는 “파업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투쟁에 제동을 걸었다.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인류)는 “공산당은 질서를 뜻한다”라는 표제를 실었다.

피베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 수반인 레옹 블룸의 홍보 보좌관이 됐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렇게 꼬집었다. “마르소 피베르는 혁명적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투쟁에 찬성하면서도 ... 쓰레기 같은 국수주의자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가르치려 한다.”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7일에는 우익 유튜브 버를 끌어모아 ‘120대 유튜브 연합 창단대회’도 열었다.

전광훈은 극단적 발언과 기괴한 언행 때문에 보수 개신교 내에서도 반발을 많이 사 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를 적극 지지해 왔다.

2018년 이후 우익 집회의 주 동력은 개신교 우파에서 나왔다. 그 핵심에 있는 전광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끌었다.

개신교 우파가 신도를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200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우파 세력은 노무현 정부 출범 1주일이 채 안 된 3월 1일 대규모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미약한 개혁 시도(국가보안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



올해 11월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하는 모습

정 등)를 좌절시키는 일등공신이 됐다.

개신교 우파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를 모방해 거리 동원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우파 정치인들과의 연계를 늘려왔다.

대선에도 적극 뛰어들어, 이명박, 박근혜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는 공식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에는 맞불 집회를 열며 계엄령 선포를 요구했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된 주류 우파 정당은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는 척했다.

관계 유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파 정치인들이 가두 우익의 활동과 관계를 유지했

다. 전광훈이 거리 집회를 조직하며 분열되고 위축됐던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자 주류 우파 정치인들은 전광훈 세력을 지원했다.

2019년 9월 전광훈이 주도해 결성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서 본부장은 이재오(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당시 결성식에 참석했다. 현 서울시장 오세훈, 현 대구시장 홍준표, 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국민의힘 전현 원내대표 권성동·김기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장제원도 당시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그해 10월 3일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요구한 광화문 집회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

원, 전 대표 홍준표,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참가해 연설했다.

최근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하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추천인 전광훈’을 쓴 입당 원서가 쏟아지고 있다(<중앙일보>). 윤석열이 지지할 후보가 누구일지를 봐야겠지만, 전광훈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친박’단체 등을 뜻함)가 조직적으로 입당해 황교안을 지지했었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 우파 결집을 위해 호전적 주장과 황당한 색깔론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한 김문수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것이 아스팔트 우파를 고무하는 듯하다. 김문수가 국회에서 문재인을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것을 윤석열이 두둔한 것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낸다.

앞으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주류 우파와 아스팔트 우파의 상호작용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대중 투쟁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

▶ 16면에서 이어짐

참사 문제 해결되려면 윤석열이 내려오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윤석열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밝혔)은 이태원 참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혀 부차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참사의 진정한, 정치적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350여 명을 압사로 죽거나 다치게 만든 참사의 배경, 발생, 은폐 시도 모두에서 진정한 책임자이다.

이태원 참사의 한 요인인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워 온 것이다. 참사가 없었다면 헬러윈 기간에 윤석열의 ‘작품’이 만들

어질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헬러윈 기간을 앞두고 국정원,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을 망라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3일 전 당정 협의로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꾸렸다.

경찰은 그런 윤석열의 충실한 손발로 움직였다.

경찰은 일선까지 강하게 통제되는 엄격한 관료 조직이다. 경찰의 조직적인 행위는 윤석열의 지시(큰 틀의 방향이든, 구체적인 지시이든) 아래서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태원 인파 대책 포기와 방치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요컨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방향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정도가 아니라, 살릴 수 있었던 160명 가까이를 하루아침에 사망케 한 데 대한 실질적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참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대중 통제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해서 위기에 대

처하려고 한다. 15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다시금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마약 범죄를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 재시동을 걸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전격적인 노동개악안 연구 보고서 발표, 부자 감세와 복지 삭감 등이 보여 주듯 윤석열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망가뜨리려 한다.

이태원 참사로 끔찍한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자. 윤석열 퇴진 운동을 더욱 키워자. 퇴진 운동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된 추모 공간 및 유가족 소통 공간을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이상민을 파면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절박한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등이 앞장서 벌써부터 유가족협의회 비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해임건의안으로 수위를 낮추는 등 벌써부터 지극히 소심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민주당이 하는 짓은 표적을 흐리는 짓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 때도 유가족들의 편을 자임했지만, 결정적인 때마다 기소권 포기 등 유가족에게 요구 수위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여야 야합으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235호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윤석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편,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거리 운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12월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진 유가족들.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윤석열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윤석열이 권좌를 지키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의는 없다

12월 13일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참사 현장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친구 두 명을 잃었던 한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이번 죽음의 책임은 실제로 윤석열에게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0호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모욕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영 '과거'가 돼 버리는 것이다.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과 정부·여당은 바로 그것을 원한다.

한편으로 특수부 수사는 용산경찰서장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희생자 사망 원인이 암사가 아닌 마약일 수 있다는 등, 희생자 유가족의 항의가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있다.

이는 모두 책임 은폐와 전가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강제력도 없는

국정조사마저 파행시키고 이태원 참사 항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정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저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려고 벌이는 '쇼'에 사람들이 놀아난다는 얘기가.

그러나 지난 한 달 남짓 사이 이태원 참사 항의와 윤석열 퇴진 운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윤석열을 난처하게 했던 상황에 견줘, 민주당은 지독하게 소심했고 결정적 순간에 배신적이었다.(관련 기사 5, 6면 '민주당의 쫄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 15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노동자연대 TV

12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차승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번역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

참가신청 bit.ly/1228-meeting